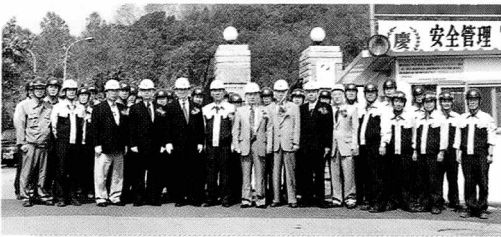


Safety News

한국전력 인천화력발전처 초일류기업으로 선정



▲ 왼쪽에서 이용호 인천산업안전기술지도원장, 김석철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이홍지 대한 산업안전협회장, 정덕한 인천화력발전처장 등



▲ 현판식기념촬영

한국전력 인천화력발전처는 대한산업 안전협회로부터 기업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를 받고 초일류기업으로 탄생했다. 이에 지난 9월 20일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에는 정덕한 처장을 비롯하여 인천화력발전처 직원이 참석하였으며, 외부 인사로는 대한산업안전협회 이홍지회장,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 김석철 소장, 홍사윤 산업안전과장이 참석하였다. 인천산업안전기술지도원에서는 이용호 원장이 참석하여 이날 현판식을 빛냈다.

한전 인천화력발전처는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원동력인 전기를 공급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화력발전소로 21세기 선진 예방안전경영시스템 구축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설비운영의 효율성 계승 발전, 안전 홍보활동 강화, 가족적인 노사관계 정착, 무재해 사업장 달성을 경영방침으로 채택하고 있다.

한전 인천화력발전처는 이를 위해 설비 1주기 무고장운전, 무재해 10배 달성, 환경친화적 설비운영을 경영 목표로 품질개선, 정비절차 준수, 취약설비 보완, 안전수칙준수, 기자재 품질확보 등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현장 안전관리자는 “우리 사업장은 현재 15년간 무재해를 이루고 있으나 무재해 산정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아직까지 무재해 10달성은 이루지 못하고 있으나 그러나 원칙적으로 보면 무재해 10배는 벌써 넘었다”다. 며 15년 이상 무재해를 이룩한데 대해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 이홍지회장 등 외부인사는 정덕한 처장과의 좌담을 나누고 있다.

Safety News

LG전자 중국현지법인 제6차 위험수색훈련 교육 실시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는 LG전자 중국 현지 법인에 대한 위험수색훈련 교육을 해주법인 사업장의 관리자급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LG전자 중국현지법인 순회 교육중 제6차 교육으로 지난 9월 5일부터 8일까지 실시하였다.

해주 교육에서는 해주 사업장 상무가 직접 참관하여 위험수색훈련을 전파할 교육생들을 독려하는 등 이번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신노사문화와 산업안전보건 세미나 개최

- 경기북부지회 주체 -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북부지회는 신노사문화 정착과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세미나를 “의정부 한마음 연수원”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경기북부지회에서 주최하여 대림산업 등 50여명이 참석하였다.

세미나 주제 발표에는 “신노사문화와 산업재해예방”에 조경원 의정부지방노동 사무소장이 발표하였으며, 김조호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장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해설 및 사업장 자율안전보건 관리”를 김진학 의정부의료원 정신의학연구소장이 “스트레스와 건강관리”에 대해 각각 발표하였다.

Safety News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 전면 개편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등 -

최근 실업률 하락 등 노동시장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장기실업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고용안정사업이 대폭 개선된다. 노동부는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금일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에 개편되는 내용으로는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채용하거나 재고용 시 지원하는 채용장려금 및 재고용장려금 제도가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로 통합·개편되고, 고령자·여성·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채용)의 지원방식이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바뀐다.

고용유지지원제도 내실화를 위해 휴업, 휴직, 근로시간단축, 훈련, 사외파견, 인력재배치 등 6가지 고용유지지원제도 중 활용도가 낮고 고용유지라는 제도 취지와 달리 활용될 우려가 있는 사외파견은 폐지되고, 기업간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수혜과정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지원금액의 최고한도가 설정된다.

영세사업장의 직업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타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경우 개산보험료의 100/100을 훈련비용으로 추가 지원 받을 수 있게 되며, 실업급여의 급여기초임금일액의 상한액이 인상된다.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노동부는 지난 20일 실업률의 하락 등 노동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채용장려금 제도를 장기실업자고용촉진 제도를 개편하는 등 노동시장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한편, 수급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등을 통해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그간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해 입법 예고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주요내용에는 고용유지지원제도 중 사업의 활용도와 효과성이 낮은 사외파견 제도를 폐지하고,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기업간 수혜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수준의 최고한도액을 정한다.

훈련을 통하여 고용유지조치를 행하는 경우 훈련대상자에게는 훈련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수준을 4분의 3(대규모기업은 3분의 2)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채용장려금 제도 및 재고용장려금 제도를 폐지하고,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로 통합한다.

또한,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방식을 지급된 임금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변경하였고, 수급장려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산재 응급의료지원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중인 불법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산재를 당했을 경우 재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함에 따라 외국 근로자로부터 많은 원성을 나갔었다.

그러나 이제는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산재를 입었을 경우에도 응급의료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5일 법무부는 과천 청사에서 김정길 법무부장관 주재로 외국인 근로자 인권 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3D업종에 종사해 높은 산재위험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응급의료기금 제도”를 적용, 의료지원을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12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4천만원 상당의 응급의료비가 지원됐다”며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에 중상·중병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인권 옹호 차원에서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사업장 우리말 사용하기 관심 고조

아직도 많은 건설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건설관련 외래어를 추방하고 우리말 애용을 통해 한국적인 건설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건설용어 우리말 사용하기 캠페인을 벌이는 등 범건설인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글날에는 건설현장의 기능인들간에 건설 관련 용어를 우리말로 어느 정도 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말 쓰기 경진대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현재 우리말쓰기 시범사업에는 현재 84개 업체에 걸쳐 169개 건설현장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 경기도 분당에 소재한 현대산업개발 “판테온리젠시” 현장 박인유 소장은 우리말 건설용어를 사용하다 다른 현장 관계자와 회의 중 일본 및 외국 용어가 나오면 이젠 거부감이 느껴진다고 하며, 우리말쓰기 운동을 전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여 빠른 시간내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동부 인사 발령

- 서기관 : 산업안전국 안전정책과 정민오 / 노정국 노사협외과 이택희 / 광주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장 전경석 / 대전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장 송영기 / 대전지방노동청 대전고용안정센터장 광노엽 / 노동부 김병욱
- 사무관 : 노사협력관실 이경우 / 국제협력관실 김연식 / 기획관리실 노동경제담당관실 정경훈 / 고용정책실 고용정책과 안국중, 박일훈, 신복식 / 고용정책실 장애인고용과 임승순, 서동립 / 노정국 노동조합과 김양현 / 근로기준국 임금정책과 최종석 / 근로기준국 산재보험과 양영권 / 근로여성정책국 여성고용지원과 이훈원 / 서울지방노동청 남석원, 정병원, 조양대, 박성우 / 경인지방노동청 진경락, 장연조 / 중앙노동위원회 사무국 박종혁, 나병선, 최선곤 